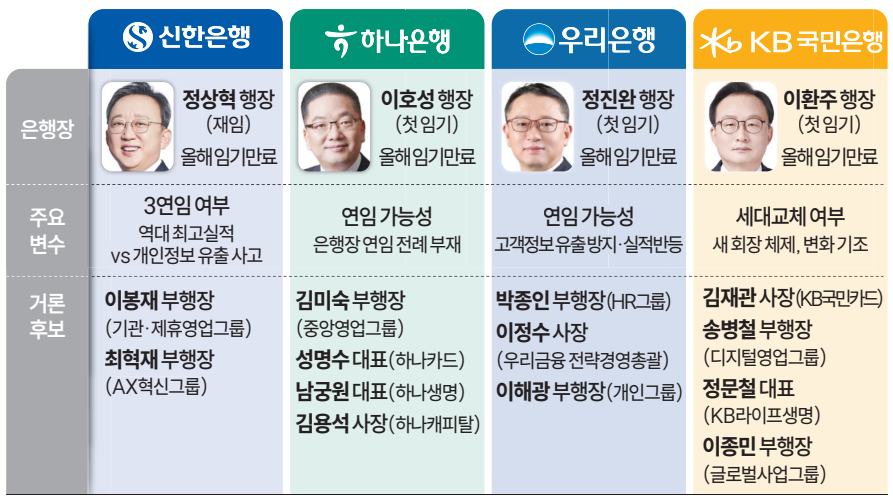
연임이냐 교체냐… 연말 임기만료 '4대 은행장' 인선 레이스

KB국민 '회장 교체' 핵심 변수로
이환주 행장, 실적만 보면 연임 유리

신한 정상혁 행장 3연임 여부 관심
차기후보에 이봉재·최혁재 등 거론

하나 전 행장 연임사례 없어 '변수'
김미숙·성영수·남궁원 등 후보군

우리 정보유출 방지·3분기 실적 반등
정진완 행장 연임 가능성에 무게



연말 임기 만료를 앞둔 4대 시중은행장의 후임 인선 작업이 본격화하고 있다. 신한금융과 하나금융이 차기 은행장 후보군을 압축한 가운데 우리은행은 현직 행장의 연임 여부, KB국민은행은 새 회장 체제 출범에 따른 세대교체 가능성이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환주 KB국민은행장과 정상혁 신한은행장, 이호성 하나은행장, 정진완 우리은행장의 임기는 오는 12월 31일 종료된다. 정상혁 행장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은 올해 첫 임기를 마친다.

각 금융지주는 경영승계 절차에 돌입해 후보군 검증과 압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신한금융은 최근 신한은행과 제주은행의 차기 행장 선임을 위한 1차 압축 후보군을 선정했다. 최종 압축 후보군의 2~3배 수준으로 후보를 추린 상태로, 추가 심사를 거쳐 12월 초 최종 후보를 추천할 예정이다.

하나금융은 4대 금융지주 가운데 가장 먼저 주요 계열사 최고경영자(CEO) 숏리스트를 확정했다. 하나은행을 비롯한 6개 주요 계열사별로 3명 이내의 후보군을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금융과 KB금융 역시 이달 중 후보군 압축과 심층 면접 등을 진행한 뒤 12월 초·중순 최종 후보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한은행은 정상혁 행장의 3연임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정 행장은 재임 기간 신한은행의 역대 최대 실적을 이끌며 경영 능력을 인정받았다. 다만 지난 9월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연임 심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차기 행장 후보로는 이봉재 기관·제휴영업그룹 부행장과 최혁재 AX혁신그룹 부행장 등이 거론된다.

이 부행장은 일본 SBJ은행 근무 등을 거친 영업 전문가로, 나라사랑카드 사업자 선정과 서울시 1·2금고 및 인천시 제1금고 운영권 유지 등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최 부행장은 디지털이노베이션그룹 상무 등을 역임한 디지털·인공지능(AI) 분야 전문가다. 신한 슈퍼SOL을 비롯한 그룹의 디지털 전환 전략을 주도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이호성 행장의 연임 여부와 함께 새로운 인물의 발탁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하나은행은 지성규·박성호·이승열 전 행장이 모두 첫 임기를 끝으로 물러난 만큼 최근 연임 사례가 없다는 점이 변수로 꼽힌다.

후보군으로는 김미숙 중앙영업그룹 부행장, 성영수 하나카드 대표, 남궁원 하나생명 대표, 김용석 하나캐피탈 사장 등이 거론된다.

특히 영업 전문가로 평가받는 김미숙 부행장이 선임될 경우 하나은행 최초의 여성 은행장이 탄생하게 된다. 남궁 대표는 자금시장그룹장과 경영기획그룹장을, 성 대표는 외환사업단장과 기업그룹장 등을 거쳤다.

우리은행은 정진완 행장의 연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정 행장은 올해 은행권에서 잇따라 발생한 해킹 사고 속에서도 고객정보 유출 피해를 방지하고, 3분기 실적 반등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박종인 HR그룹 부행장과 이정수 우리금융 전략경영총괄 사장, 이해광 개인그룹 부행장 등도 차기 행장 후보로 거론되면서 최종 인선 결과에 관심이 모인다.

KB국민은행은 차기 그룹 회장 교체가 은행장 인선의 핵심 변수로 부상했다.

KB금융은 지난 9월 양종희 회장 대신 이재근 부문장을 차기 회장 최종 후보로 선정했다. 당시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과감한 변화와 세대교체 필요성을 인선 배경으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새 회장 체제의 첫 주요 계열사 CEO 인사인 국민은행장 선임에도 변화 기조가 반영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환주 행장은 취임 첫해인 지난해 국민은행의 당기순이익을 전년 대비 18.8% 증가한 3조8620억원으로 끌어올리며 리딩뱅크 탈환을 이끌었다. 경영 실적만 놓고 보면 연임에 유리한 성적표를 확보한 셈이다.

다만 이 행장은 1964년생으로 차기 회장 후보인 이재근 부문장보다 두 살 많다. 앞서 그룹 회장 후보 선임 과정에서 이 부문장과 경쟁했다는 점도 변수로 꼽힌다.

차기 국민은행장 후보로는 김재관 KB국민카드 사장과 송병철 국민은행 디지털영업그룹 부행장, 정문철 KB라이프생명 대표, 이종민 국민은행 글로벌사업그룹 부행장 등이 거론된다. 이환주 행장의 연임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 있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은행장 인사가 단순한 경영 성과 평가를 넘어 금융사고에 대한 내부통제 책임, 디지털 경쟁력, 그룹 지배구조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인선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온라인 불법 금융광고 사전 규제방안 논의

현장에서

박상혁 민주당 의원, 간담회
"현행, 불법광고 적발 후 사후차단
플랫폼, 광고주 확인 의무화 제안"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오른쪽에서 여섯 번째),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 원장(오른쪽에서 다섯 번째) 외 관계자들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온라인 금융광고 신뢰 확보' 간담회에 참여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안재선 기자

온라인 불법 금융광고를 차단하기 위해 플랫폼 사업자에 광고주 사전 확인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동시에 정부가 검증에 필요한 공신력 있는 등록·인허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해 실효성 있는 민관 공동 협력체계를 구축하자는 구상이다.

2일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국회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온라인 금융광고 신뢰 확보' 간담회를 열고 온라인 불법 금융광고 사전 규제 도입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는 한국대부금융협회, 코딧 글로벌정책실증연구원이 주관했다. 토론에는 국회입법조사처, 서민금융연구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관계자가 참여했다.

발제는 남궁주현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아 진행했다. 남궁 교수는 '온라인 불법 금융광고 근절을 위한 플랫폼 자율규제 실효성 강화 방안'을 주제로 플랫폼과 정부의 역할 분담 필요성을 강조했다.

남궁 교수는 "현행 대부업법은 누가 광고를 할 수 있는지 등을 규율하고, 불법광고가 적발된 이후에는 차단 등의 사후조치가 이뤄지고 있다"며 "그러나 그 중간 단계가 비어 있다. 광고를 의뢰한 사람이 실제 해당 업체를 대리할 권한이 있는지, 플랫폼에 올라온 광고주가 정식 등록된 업체인지 등을 확인하는 절차가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악한 고리를 통해 불법사금융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올해 온라인 불법사금융 광고 적발 건수는 7855건으로, 전년(5292건) 대비 48% 증가했다. 적발 광고의 77.7%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노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남궁 교수는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 금융광고 플랫폼 사업자에 광고주 사전 확인 의무를 부과할 것을 제안했다. 광고를 게재하기 전에 플랫폼이 광고주의 등록 자격과 대리관계를 확인하고, 이를 공적 정보와 대조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뒷받침할 정부의 역할도 강조했다. 정부는 검증에 필요한 공적 등록·인허가 정보와 감독·집행 기반을 제공하는 한편, 플랫폼사가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자율규제 환경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제도 설계를 위한 원칙도 제시했다. 위험 수준에 비례해 확인 의무의 강도를 정하고, 플랫폼의 확인 범위를 명확히 한정해야 한다는 것. 아울러 정부는 최신 등록·인허가 정보를 전자적으로 제공하고, 확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플랫폼에 대해서는 일정한 책임 제한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토론에서는 제도 도입의 선결문제가 논의됐다.

김대성 국회입법조사처 재정금융과 입법조사관은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는 시·도별로 관리되며, 그 등록현황은 공공데이터포털에 지자체별 파일데이터 형태로 공개돼 있어 실시간 대조에 사용하기 어렵다"면서 "시·도의 등록원부 자체를 금융위원회 정보시스템에 직접 입력·연계하는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책임 부과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심승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만일 플랫폼 서비스 제공자에게 의무와 그에 대한 책임을 과도하게 부과할 경우 자율규제의 자율성을 감소시킬 뿐 아니라 형법상 책임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더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중소기업 위해 생산적금융 기반 정비를"

이억원 금융위원장
제6차 생산적금융 대전환 회의
5극3특 핵심기업 지원확대 논의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6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중소기업의 연체율이 높아지는 가운데 금리인상이 현실화 할 경우 기업의 이자부담이 커지고 자금조달 여건도 어려워질 수 있다. 기업들이 금리 인상과 경기 변동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생산적 금융의 기반을 정비해 나가겠다."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2일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제6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는 이억원 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16개 국내 은행, 신보 및 기보, 은행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이 참여해 5극 3특 지역 내 핵심 중소·중견기업 지원 확대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억원 위원장은 이날 생산적 금융 대전환의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금리 상승기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자금 공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억원 위원장은 "금융권이 생산적 금융 대전환을 통해 가계대출과 부동산으로 쏠리던 자금흐름을 실물경제와 기업으로 돌리기 위해 노력했고, 총 264조 3000억원을 생산적 분야에 공급하고 기업대출 잔액도 전년말 대비 증가하는 등 의미있는 성과도 거뒀다"라면서도 "그러나 이러한 성과가 중소·중견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만큼 충분히 확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분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은행권은 신보 및 기보 특별출연을 통해 향후 3년간 4조5000조원 규모의 보증부 대출 지방금융 공백 해소를 위해 공급하기로 결정했다. 은행권이 3000억원 규모의 보증 재원을 출연하면 신보와 기보는 약 15배 규모의 협약보증을 공급하고 기업들을 심사한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조기 현금화 수단으로 활용하는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제도도 개편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납품 대금을 신속하게 회수하고, 불필요한 금융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

먼저, 상생협력법 취지 등을 고려해 중소기업이 납품대금을 신속히 수취하여 현금화할 수 있도록 외상매출채권 및 외상매출채권과 유사한 상생채권 만기를 60일 이내로 단축한다.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은행에 부여했던 50% 규모의 상환청구권도 폐지한다. 기존에 상환청구권이 부여된 대출의 경우에도 2027년 1월 이후 만기가 도래하거나 갱신하는 경우 상환청구권을 연장하지 않는다.

외담대 조기 상환 시 구매기업에 지급됐던 이자 환급금도 판매기업에 부여되도록 개선한다. 또한 2차 이하 판매기업이 최상단 구매기업의 신용을 바탕으로 외상매출채권을 조기 현금화 할 수 있는 상생결제론 취급 구매기업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상생결제 이용업체 인센티브도 늘린다. 이번 제도 개선안은 오는 2027년 1분기 내 시행을 목표로 한다. /안승진 기자 asj1231@